



2017. 2. 21 (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제2차 회의결과 보고서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2차 회의결과 보고서

## □ 개 요

- 때 · 곳 : '17. 2. 21(火) 11:00 ~ 12:00 /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 참 석 : 19명 (연구모임 회원 14, 직원 등 기타 5)
- 회의내용

보고 2017-2-1호) 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회의 2017-2-1호) 축산 관련 현황분석 결과

회의 2017-2-2호) 무허가축사 관련 질의응답 및 조례 개정 현황

회의 2017-2-3호) 향후 일정 관련

## □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
대표	김응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연구간사	이상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회원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정규재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장	
	오형수	충청남도 축산과장	
	김기웅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장	
	백충현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장	
	김경태	한돈협회 아산지부장	
	서석천	두원농장 대표	
	홍성학	계림농장 대표	
	강정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 본부장	

## 회의결과

### □ 인사말씀

- 김응규 위원장님

### □ 회의자료 소개

- 이상준 간사
  - 보고 2017-2-1호) 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 회의 2017-2-1호) 축산 관련 현황분석 결과
  - 회의 2017-2-2호) 무허가축사 관련 질의응답 및 조례 개정 현황
  - 회의 2017-2-3호) 향후 일정 관련

### □ 회의 및 토론

- 김복만 의원님
  - 일부 지자체처럼, 무허가축사와 관련된 지원기준이 너무 세분화 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
  - 농민신문에서, 농협중앙회가 무허가축사 지원단(컨설팅 대전 김용각 건축사 사무소)을 출범시킨 것으로 나오는데, 그 만큼 무허가 문제는 중요한 사항임
  - 축산 농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김명선 의원님
  - 무허가 축산농가 등의 적법화를 위해, 지자체 뿐만 아니라, 충남도 관련부서에서도 “예산”이나 “행정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우 농가 등의 경우, 주택가 인접성, 토지 확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임

- 일부 지자체(당진시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50%로 조정하는 안건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홍재표 의원님

-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축산업이 크게 기여하였음
- 축산업의 문제는 ① 무허가 문제, ② 환경문제, ③ 주민 마찰 문제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12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설건건축물”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적법화”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함
- 무허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내포에서 추진했던 것과 같은 “이주, 이전”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백충현 위원님

- 아산시의 적법화 추진율이 낮은 편임
- 소규모 축사의 경우, 법이 일몰될 시점까지 “버티다 그만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편임
- 축산농가가 줄어든데 적법화가 좋은 것인지 의문임
- 홍재표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은 축산시설이 축소되거나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음

○ 김정태 위원님

- 건축사 사무소와도 협약을 하였지만, 버티다가 안되면 그만둔다는 생각이 일부 있어, 현재는 눈치만 보고 있음
- 적법화와 양성화의 문제에서, 본인은 1996년처럼 양성화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이 시점에서 양성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자체는 이격거리 하나만 부각시키는데, 양돈에서는 “폐수처리”가 더 어렵고 중요함

○ 서석천 위원님

- 아산시 무허가 축산농가의 경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임
- 충남도나 아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홍성학 위원님

- 홍천이나 철원의 경우, 태안군처럼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 지자체에서 측량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가설건축물이 80~90%인 축산농가가 매우 많은 실정으로, 축산농가에서도 이를 60%에 맞추고자 하는 자생적 노력이 필요함
- 우제류나 가금류 등을 구분한 이격거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행강제금은 일부 지자체(당진시 등)처럼 50%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은 법규 중심이 아닌 “실증사례”를 중심으로 축산농가가 전문가 등에 문의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글을 보고 “문답식”형태로 추진하였으면 좋겠음

○ 강정원 위원님

-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궁금함
- 차라리, 적법화 법규 적용을 “연기”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함

○ 정규재 위원님

- 문제점에 분석은 되었음
- 이제 법과 제도, 행정지원 등을 구분한 “해결안건”을 제시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판단됨

○ 김기웅 위원님

- 축산 폐수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기준은 ① 소는 500㎡ 이상, 돼지 600㎡ 이

- 상일 경우, 2018년, ② 소는 400~500㎡, 돼지 500~600㎡일 경우, 2019년 이며, 이때 소규모 농가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충남도는 적법화 법 적용 시점이 되면 점검을 강화할 예정임
  - 축산농가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
  - 축산농가 등의 환경 인식 제고도 필요함

○ 오형수 위원님(축산팀장 대신 참석)

- 축산 부서는 총괄부서로, 과거 양성화와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축산농가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적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충청남도과 지자체에서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회의사진

